

‘민간공원 특례사업’ 광주시 압수수색

행정부시장실 · 시의장실 · 감사위원회 등

檢 “감사자료 등 미흡···강제수사 전환”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2단계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광주시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5일 광주시와 광주지검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수사관을 보내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행정부시장실과 환경생태국, 감사위원회, 시의회 의장실, 세종시에 있는 한 정부종합청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일부 관계자들의 휴대전화 등도 압수하는 한편 압수수색 현장에서 디지털 포렌식으로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세종시 한 정부종합청사는 공직자들에 대한 폐일이 보관돼 있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특정검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진행됐다.

검찰은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 각종 의혹이 있다는 광주경찰의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를 벌이고 있다.

고발 내용은 광주시 민간공원특례사업 제안서와 평가결과 보고서 유출, 우선협상대상 선정 과정의 이의제기 수용 의혹, 특정감사 실시 배경 이유, 광주도시공사 중앙1공원 사업자 반납 등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팀을 배정해 감사관련 서류를 확보하는 한편 공무원 등 관련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확보한 감사자료 등에 대해 미흡한 부분이 있어 강제수사로 전환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성격상 특수부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 전날 사건을 특수부로 배당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장 접수와 관련해 수사를 진행했는데 압수수색을 진행할 정도의 혐의가 소명됐다”며 “다만 추가로 누가 수사 대상인지 등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해 11월8일 민간공원 2단계 사업 5개 공원 6개 지

구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했지만 일부 텔리업체들의 이의제기와 평가 과정의 불공정성, 선정 결과 사전 유출 등의 논란이 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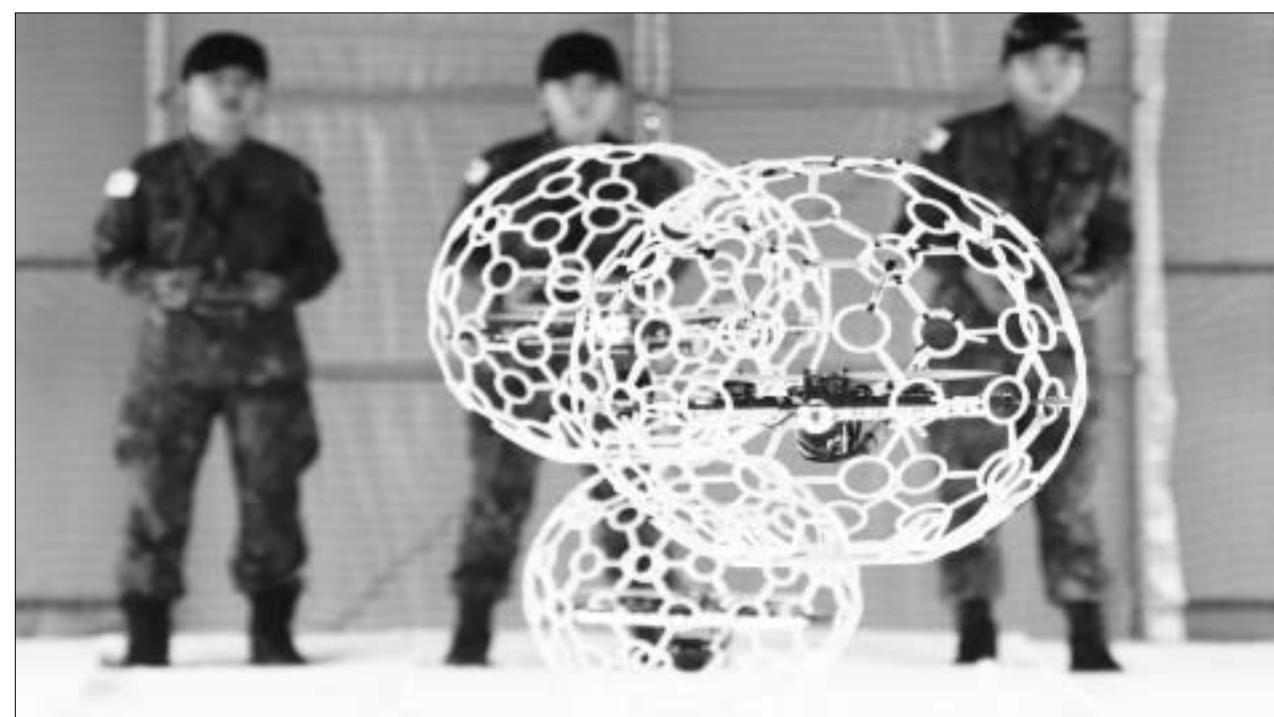
이에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특정감사에 착수했고, 일부 부적정한 내용이 사실로 확인돼 재평가를 통해 2단계 우선협상대상자 6곳 중 중앙공원 1지구와 2지구 등 2곳을 변경했다.

중앙공원 1지구 광주도시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자진 반납



5일 오전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 광주지검이 광주시청 공원녹지과, 감사위원회, 행정부시장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사진은 압수수색에 협조하는 광주시청 공무원들.

하면서 2순위인 (주)현양이 선정됐고, 중앙공원 2지구는 우선협상대상자가 금호산업(주)에서 (주)호반으로 바뀌었다.



드론도 실전같이 5일 강원 원주시 육군 제36사단 드론훈련장에서 여군들이 드론배틀팀 사범훈련을 하고 있다.

올해 전남 학업중단자 1363명···학년 올라갈수록 증가

학업을 중도에 포기한 전남지역 학생이 올해 1363명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혁제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4)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발표한 ‘2019년 교육기본통계’에서 학업 중단자에 대한 분석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9년 전남 초·중·고 학생 19만9653명 가운데 0.7%인 1363명이 학업을 중단했다.

학업중단자 중에는 초등학생이

306명 (0.3%), 중 학생 184명 (0.4%), 고등학생 873명 (1.5%) 등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업중단 비율이 높았다.

여학생 학업중단자 수는 2015년 697명, 2016년 592명, 2017년 659명, 2018년 640명, 2019년 695명이다.

전남 고교생 학업중단자는 2017년 880명 (1.3%), 2018년 903명 (1.4%), 2019년 873명 (1.5%)으로 나타났다.

고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자율고 54명 (0.9%), 일반고 356명 (1.0%),

뉴스1

80대 노인들이 받은 두 운전자 조사

광주 북부경찰서는 5일 보행자를 차량으로 들이받은 혐의로 1차 가해자 A씨(28)와 2차 가해자 B씨(73)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7시30분쯤 광주 북구 두암동 한 생활도로에서 승합차로 C씨(84)를 들이받고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쓰러져 있던 C씨를 들이받은 혐의다.

C씨는 B씨의 신고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특가법상 도주처량 혐의로 사고를 냄 뒤 달아난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커브를 둘면서 C씨를 들이받은 줄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부검과 감식 등을 통해 직접적 사망 원인을 파악한 뒤 A씨와 B씨 중 누구에게 치사 혐의를 적용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체불임금 달라” 50대 크레인서 고공 농성

완도 모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체불임금 정산을 요구하며 타워크레인에 올라 5시간 동안 고공농성했다.

5일 완도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20분쯤 노동자 A씨(54)가 전남 완도군 완도읍 모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내 타워크레인 50m 꼭대기에 올라 농성을 벌이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5시간 여동안 ‘체불 임금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경찰의 설득에 크레인에서 내려왔다.

경찰은 공사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어머니 살해 · 유기 20대 아들 2심 징역 20년

자신과 딸었던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판결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태호)는 5일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증거 등을 살펴보면 A씨의 범행에 대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을 변경해야 할 사정이 없는 점 등을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4일 오후 11시쯤 집 거실에서 어머니 B씨(55)의 목을 조르고 벽쪽으로 밀어 넣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숨진 어머니를 옆 방으로 옮긴 후 침대 아래로 밀어넣고 이불로 덮어 유기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A씨는 사건 당일 “어머니가 운영하는 가게를 여자친구와 운영해보겠다”고 말을 했으나 어머니로부터 욕설과 함께 폭행을 당하게 되자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사기 노조 간부 도피 도운 경찰 징역형

취업청탁 혐의로 도주 중이던 전 노조 간부의 도피를 도운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판결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염기창)는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 경정(48)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절친한 친구의 부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있다”며 “하지만 A씨가 경찰공무원으로서 기본적인 의무를 위반하고 은신처를 암시하고 도피자금 및 계좌 대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약 6개월 동안 범인을 도피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관으로서 의무 위반 정도가 중대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1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취업 명복으로 19억원을 가로챈 전기아차노조 광주지회 부회장 B씨(49)가 기아자동차 채용시기에 연루된 사실을 알고도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